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안

## 1. 의결주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2. 5. 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를 말한다. 다만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예규 등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제2항, 제3항)
-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심판·결정·조정·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제1항)
-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직무”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위원의 직무, 2.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그 밖

의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및 「공탁법」에 따른 공탁업무를 규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2항)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의 절차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법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속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안

붙임과 같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속기관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2.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본다.

###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예규 등으로 정하는 자

③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심판·결정·조정·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①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심판·결정·조정·화해 또는 이에 준하

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위원의 직무
2.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및 「공탁법」에 따른 공탁업무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사전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유형·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 제8조(신고 등의 기록·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9조(이해충돌방지 교육)

-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연락처	(02) 3480 - 1796